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42
----------	-------

발의연월일 : 2022. 8. 2.

발 의 자 : 주호영 · 강대식 · 강민국  
구자근 · 권명호 · 권성동  
권은희 · 권철승 · 김기현  
김병기 · 金炳旭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승수 · 김영식 · 김영진  
김예지 · 김용판 · 김정재  
김태년 · 김태호 · 김학용  
김형동 · 김희재 · 김희국  
류성걸 · 박대수 · 박덕흠  
박성민 · 박정하 · 박형수  
배현진 · 서정숙 · 소병철  
송석준 · 송언석 · 신원식  
안규백 · 안철수 · 양금희  
엄태영 · 유경준 · 유상범  
유의동 · 윤두현 · 윤상현  
윤재옥 · 윤주경 · 윤창현  
이만희 · 이병훈 · 이양수  
이 용 · 이용호 · 이인선  
이종성 · 이철규 · 임병헌  
임이자 · 장동혁 · 전주혜  
정운천 · 정찬민 · 정희용

조명희 · 조은희 · 조해진  
주철현 · 지성호 · 최승재  
최연숙 · 최영희 · 최재형  
최춘식 · 최형두 · 태영호  
하영제 · 한기호 · 한무경  
허은아 · 홍석준 의원  
(83인)

###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부권역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 중추공항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

나아가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주요 도시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 사업으로 추진함을 분명히 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물류·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 다.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

개발특구, 특별건축구역,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마.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안 제27조).

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44조의2까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물류·여객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신공항”이란 K-2 대구 군 공항 및 대구 국제공항을 이전하고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나. 통합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

## 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의 시설 등의 조성

라.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구축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기반시설 건설

3.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종전부지”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5.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이란 통합신공항이 이전하고 건설되는 군위·의성군 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

행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여객중심의 복합공항
2.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과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지방중심의 내륙공항 등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주요 도시로부터 통합신공항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
3.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비행장 규모
4.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5.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국제규모의 관광·상업·첨단산업 도시 조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개발사업”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군 공항 이전) K-2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이전절차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민간공항 이전) 공항개발사업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제9조(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 ① 군 공항 대체시설로 기부하는 재산과 용도 폐지 후 양여하는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조의 기본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의 시설규모를 고려한 이전시설의 소요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

1.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군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1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

2.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제13조제1항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보조금 보조율 인상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3조제1항의 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주변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 및 세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에 따른 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규정을 따른다.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종전부지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

의 시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을 위임받은 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에 관한 절차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3조에 따른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 시설사업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1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임목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국방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3조에 따른 시행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13조에 따른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⑤ 제13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제13조에 따른 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라 한다)는 이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보

고 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부대공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2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비용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항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기구) 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이 전주변지역 일원에서 시행되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

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0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수용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4. 교통처리계획
  5. 도시문화계획
  6. 경관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9.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2. 재원조달계획
  13. 종전부지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22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④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지구 등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23조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입목적 변경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



- 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

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②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23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5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통신·가스,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변지역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인근 지역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

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27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정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경우 제2조제2호와 제6호의 사업에 우선하여야 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부족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 경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어

「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민간자본 유치) 제13조 및 제21조의 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32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관련 산업단지의 관



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4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 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6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3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13조에 따른 시행자 및 공항 운영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4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41조(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연구, 관광·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42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광역교통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특례) 통합신공항의 이용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광역철도에 대하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비용 분담을 상향할 수 있으며, 운영비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4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감독) ① 국방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보고·검사 등) ① 국방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